

광남시론

차기정부의 한반도 통일 외교정책 제언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정치학 박사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로 혼란했던 대한민국의 정국이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 없다는 명제를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게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오는 6월 3일에 예정된 대선결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정부의 가장 큰 해결책중 하나가 분단 80년을 극복하는 한반도 통일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대한민국이 차기정부에서는 기필코 통일의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2025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정세가 무섭게 꿈틀거리고 있다. 그것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로 응비할 수 있는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이다.

새로운 정부 출현과 함께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통일과 변영을 물고을 새로운 변화는 먼저, 한국,미국,러시아의 합종시대의 도래이다. 한,미,러 합종은 한국, 미국, 러시아가 전략적 보안관계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1위 강대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동맹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유럽등 서방의 제재속에서 동쪽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북극항로와 원유와 천연가스등의 에너지 자원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를 얻을수 있다. 한,미,러 합종은 단순한 외교전략이 아니다. 한민족

의 통일과 변영을 위한 문명사적 해법이 될 것이다. 북극항로의 개통, 최근 종전에 다다른 러우전쟁의 전후 재편,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등은 한민족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차기정부는 기존의 강력한 한미동맹의 틀위에서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연합하면 한민족의 통일은 물론이고 세계사의 정상으로 우뚝설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다른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국의 쇠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움직임이다. 미국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전쟁을 하지 않고 중국을 미국의 도전자 반열에서 탈락시키고 공산당 정권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물려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자유화, 민주화 해야 하는데 그럴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 공산당이 해체되어 나라가 분열된다. 위구르, 티벳, 몽고, 광둥성 등이 독립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견해로 시진핑은 경제부진의 책임과 군부의 반발로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2027년 이전에 대만의 무력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중국의 힘을 빼기시작하면서 각 지역의 군벌들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더 이상 강대국의 지위를 잃을수 있다. 이러한 한,미,러의 합종과 더불어 중국이 점차 쇠퇴하는 시기에 차기정부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쳐야 할것으로 본다.

그 방법론으로 첫째, 왜곡된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해 새로운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역사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남북 역사학자들이 모여 왜곡된 상고사를 복원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바른역사찾기위

원회'를 만들어 우리의 역사교과서를 개편하고, 이 토대위에 한민족 통일의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하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이중적 태도라고 볼수 있다.

둘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관계회복의 메시지와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과 원산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 셋째, 통일시대를 맞이해 전 국민에게 통일세를 징수하고 통일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유명무실한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언론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재처럼 일회성 보여주기식 정권홍보용 통일행사를 지양하고 전국민들의 피부에 파고드는 실질적인 한민족의 통일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등의 법을 새로 정비하고 공직자들이 1년에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하며 통일교육 실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한,미,러 합종과 새로운 통일정책을 통해 천년의 축복을 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는 통일된 한반도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변영을 이루기위한 역사적인 과제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와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이 역사적 순간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차기정부는 한,미,러 합종전략으로 새로운 문명사적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통일된 한민족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기고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



올해 영남지역을 위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규모가 어마무시하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4만8238.61ha로 추정되며 이 중 경북이 4만5157ha로 94%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면적은 630만ha로, ha당 공익적 가치는 약 4110만원으로 산불로 훼손된 4만8238.61ha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1조982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나무가 다시 울창해지려면 20년, 흙속 미생물까지 완전 복원되는 데는 100년이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봤을 때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오는지를 여실히 실감할 수 있었다.

산불은 자연재난 같지만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거의 대부분의 요인이 불법 소각이나 실화 등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이다. 수십수백년에 걸쳐 심어놓은 나무들이 안전에 불감한 일부 시민에 의해 불법소각이나 실화로 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한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예방이 가능하다. 안전문화는 단순한 규칙 준수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 전체가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을 생활화하는 문화로 이러한 문화는 하루아침에 정착되기는 쉽지 않고

‘안전한 도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회전반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속에 정착될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실현을 위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리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은 내 주변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수칙을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실천에 옮기는 길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 할 것이다.

우리 광주시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화재·전기 등 생활, 교통, 재난, 삼폐소생술 등 보건안전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준수사항과 위험요인 발생 시 대처법을 익히는 시민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만 5~13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관을 시청사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사분기에만 해도 4200명의 어린이들이 다녀갔다.

또한, 혹서·혹한기, 연영대별, 위험요인별 안전생활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유관기관 및 시민실천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올해는 특히 대자보도시를 위해 지켜야 할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 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한 삶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시민이 요구할 수 있

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안전신문고다.

시민들이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험요인을 관에서 제거해 나가는 것으로, 2024년 우리 시의 경우 생활불편, 생활안전, 불법주정차 등 총 52만여 건 신고 되어 81.7%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길을 걷다가’, ‘차를 타다가’ 이거 위험한데라고 느끼는 것 무엇이든,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시면 광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또한 광주에는 344명의 안전보안관이 있는데 생활 속 고질적 7대 안전부시 관행(불법 주정차 등) 신고 및 안전점검·예찰활동을 통해 위험 요인을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걷기 좋은 도시 광주를 위해 PM(개인형이동장치)안전하게 타기,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포트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내가 무심코 지키지 않은 안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안전실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도 좋겠다. 신고 대기시간이 길다고 무단횡단은 하지 않았는지,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대지는 않았는지,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춤은 하였는지, 허용된 공간에서만 불을 피웠는지, 작업을 할 때 기본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안전은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시민의 공동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약속이자 책임이다.

안전한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사설

세월호 참사 11주기 “잊지 않겠다”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추모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28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해상사고를 말한다. 당시 희생자 중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포함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만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 또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세월호 참사 11주기 계기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노란 리본 달기, 세월호 11주기 현수막 및 추모 문구 게시, 안전한 교육실천 다짐 선언, 사이버 추모관 운영 등 다양한 추념 행사도 열기로 했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본청 직원들이 304명의 희생자 이름이 담긴 세월호 염서에 ‘다시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적는 ‘실천 다짐 명함 서명’을 갖기로 했다고 한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과 광주청소년촛불모임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분향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분향소에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사진이 놓여있다. 시민상주모임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결성돼 11년째 시민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남구 푸른길 촛불모임과 광주 서구 풍암 촛불모임을 비롯해 순천과 광양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린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재단은 16일 세월호 침몰해역인 진도군 동거차도 해역에서 선상추모식을 갖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고 발생 1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고원인을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유가족들이 지금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가슴 아픈 사건이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날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주신세계 사회공헌 눈에 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광주신세계의 사회공헌 활동이 눈에 띈다. 개점 이후 소의계층과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임직원들의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먼저 지난 1995년 개점 이후 지금까지 섬없이 ‘장학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역인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학습 장학회, 서구 장학재단 등에 매년 연간 총 1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후원해 온 것이다.

2014년부터는 1억30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현재 총 누적 지원금은 33억원이나 되며 누적 수혜자는 30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 2017년부터 광주 서구 및 지역 내 복지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기관과 연계해 결손 및 위기가정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S-BOX’를 펼치고 있다.

‘사랑의 S-BOX’는 매월 500만원, 한 해 총 6000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패키지 박스를 만들어 소의계층 100세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서구 지역 내 5개 복지관에서 추천받은 가정에 간편 조리식품, 간식, 생필품 등 1대 1 맞춤형 패키지를 구성해 전달하는 것이다. 그동안 4억8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임직원들이 직접 물건 구매부터 박스 포장까지 함께 하고 있다.

2004년부터 21년째 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결손아동지원’ 프로그램도 돋보인다.

매년 42명의 아동에게 매달 7만원씩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총 누적 수혜자가 840명이고, 누적 금액만도 7억3000만원이나 된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온 ‘희망배달캠페인’은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진행,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바람직한 사회공헌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결연 아동을 정기 후원하거나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광주시정 등 희망장난감 도서관 건립 등에 쓰였다고 한다.

특히 임직원들이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달 광주전 정화활동과 사업장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의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희망산타 원정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1995년 업계 최초로 현지 법인을 세워 이제는 광주·호남 대표기업으로 자리잡은 광주 신세계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